

##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전면 적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1. 개요

- 일시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세월호 기억관 앞(집결 후 약식집회)-행진-서울고용노동청 앞(본대회)
- 주최.주관 : 민주노총

#### \*사전 결의대회

- 오후 1시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위령제 (세월호 기억관 앞)
- 기조 :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으로!
- 주요 슬로건 : 일하다 죽지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 노동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하자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하자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안전한 사회 쟁취하자
-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쟁취하자
- 산재 노동자 모욕, 중처법 공포 사기극 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 노동부는 산안법, 산재보험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프로그램 및 방식
- 서울 시내 주요 도심 행진
- 약식집회(세월호 기억관 앞) -> 행진 -> 본 집회(서울고용노동청 앞)
- 행진 시 추모 다임 퍼포먼스, 대시민 선동, 현장 발언 등 진행
- 본 집회 투쟁 결의 발언, 노동부 규탄, 항의행동, 상징의식 등으로 마무리

### 2. 취지

-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함.
-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와 반노동은 4월 총선으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음.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노동부는 여전히 원청과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근거도 없이 산재노동자를 부정수급자로 매도하며 산재인정 기준을 높이고 보상을

축소하는 산안법, 산재법 개악을 밀실 줄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 더 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히 입법추진되어야함.
- 이에 노동시민 재해를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며, 생명 안전 후퇴 윤석열 정권 퇴진, 산안법.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 추진 노동부 장관 퇴진의 필요성과 생명안전 입법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투쟁 결의를 모으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함.

### 3. 세부 프로그램

#### (1) 약식집회 : 세월호 기억관 (서울시의회-동화면세점)

- 사회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3:50	대오 정비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노동재해 추모 및 안전한 일터 요구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0	시민재해 추모 및 안전한 사회 요구	416연대 박승렬 대표
		최정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고 최유진님 아버지)
14:25	행진 준비 . 시작	

#### (2) 추모 다이인(die in) 퍼포먼스 : 보신각 사거리

내용	준비 / 담당
추모 다이인(die in) 퍼포먼스 :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향해 결의하는 퍼포먼스 진행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동시 진행

#### (3) 행진 집회 : 종로2가 사거리

내용	발언 / 담당
행진대오 1	안전보건 현안 발언(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박종회 경인본부장, 화섬식품노조 김종호 광주전남지부 여천NCC지회장)
행진대오 2	안전보건 현안 발언(금속노조 심경수 대창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금속노조 )

#### (4) 본 집회

- 사회 : 민주노총 이미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시간	내용	발언
3:20	대오 정비	
3:3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3:35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결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3:40	피해자 유족 발언	김미숙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3:45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투쟁 결의	금속노조 이태진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적용 쟁취 결의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노조탄압과 건설안전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3:57	공연 : 문화 공연	장현호 문화노동자
4:07	산재보험 개악 추진 규탄	울산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
4:12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근절대책 요구	박선유 인천지역 중대재해사업단 운영팀장
4:17	결의문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도원 부분부장/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4:20	항의행동 및 상징의식	

#### 4. 대회 결의문

### 일하다 죽지 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생명안전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생명안전 입법 쟁취하자!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로 이어지는 눈물과 분노의 행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에 정권과 정치권은 거부와 지지부진으로 일관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거부하였다.

노동시간 개악 추진으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고,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화물안전운임제를 폐기하여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시민안전의 위협은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노조 역할마저 없애 버리려 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노동자 시민들의 헌신적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엄정한 집행과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억)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였다.

노동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책임져야 할 노동부는 ‘기업부’로 전락해 밀실 줄속으로 생명안전 개악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에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 산재카르텔이라며 산재피해 노동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매도하며, 근거도 없이 노동자의 산재인정 기준을 높이고 보상을 축소하는 산재보험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 반노동은 이번 4월 총선을 계기로 엄정히 심판받았다.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아 생명안전 입법에 지금당장 나서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방의 핵심인 위험 작업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 책무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을 당장 멈추고 퇴진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밀실 줄속 개악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지금 당장 입법에 나서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4월, 민주노총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막고, 위험한 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6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생명안전 입법쟁취 투쟁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자 시민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생명안전 개악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부 장관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별첨 : 주요 발언문

## ※ 별첨 : 주요 발언문

### ■ 본대회

#### <김미숙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이번 총선 때 현 정권이 그동안 무능을 넘어 무식으로 나라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고 여당의 참패는 시민들이 명확하게 심판한 결과였습니다.

정권 잡은지 2년 밖에 안 되었는데도 나라 안팎으로 행적을 보면 개차반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권리를 강압적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반노동 기조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특수고용 일용직 노동자들을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수십명이나 투옥까지 시켰습니다. 전국민 상대로 노동 혐오 정책을 펼쳐왔기에 급기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보호해도 모자랄판에 반대로 사회적 타살을 종용한다는 것이 보고도 믿기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윤정부의 반노동 기조로 실효성조차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1년에 2400명 용균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논리로 수많은 혈육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이나라가 저는 참으로 역겹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돌아가신분들과 유족에게 정부가 사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사죄에 이어 다시는 이전처럼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돌며 위험성을 조사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자세를 보여야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정부와 노동부장관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민생법을 거부권 남발하고 산재보험 개악으로 근거도 없이 환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매도해서 보상의 문을 좁게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죽지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나라가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승자독식을 강요당하고 노동자를 기계부품으로 여기는 반인권적인 야만적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엔 이 나라가 존폐위기까지 내몰릴 것이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무뉘만 다른 비정규직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해 국민 모두가 희망을 꿈 꿀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평생 죽어라 일해도 살림은 쪼그라들어 허덕이게 내몰았습니다. 이판사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엉망인 세상은 되었지만 소중한 자식들을 지키기위해 이대로 엉망된 세상을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소중한 만큼 우리 손으로 꼭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법을 신속히 확대 적용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검찰은 법 위반 사업주를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댓가로 엄정하고 강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이 기막힌 죽음의 행로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만큼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제도개선과 입법에 나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노동자가 출근해서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생명안전 사회를 앞당기는데 누구 예외 없이 나라 전체가 협력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길에 정부와 국회가 먼저 앞장서길 요구합니다.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것처럼 나라 이미지가 가져오는 행불은 천지차이가 날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킨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윤정부는 지금까지의 실책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경제발전만을 운운하지 않길 바라며 제발 생명 가치 존중을 위해 민생을 살필 소통 창구를 많이 열어 경청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 요구를 무시할 시 지금보다 더 흑독한 심판이 윤정권을 기다린다는 것을 절대 잊지않길 바랍니다.

#### <금속노조 이태진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474.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외벽에는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는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현대중공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애사심과 애국심으로 노동자들을 위협으로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였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왔습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자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작업중지’ 가 도입된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 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라는 말과 함께 ‘작업중지권’ 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를 남발하고, 법원은 ‘작업중지권’ 의 입법목적인 예방보다는 사고발생의 유무, 피해의 정도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온 공범이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일터에서 작동되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노동자의 기준으로 개정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외벽은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벽에 씌어진 글귀는 단지 문구에 불과했고 위험을 알더라도 불안정한 고용과 생산 압박속에서 어느 누구도 위험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일이 최근 언론에서 조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삼성물산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자료를 배포하였고, 경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삼성물산 작업중지권을 전면보장 한지 3년만에 30만건 돌파, 하루 평균 270건으로 5분마다 한 번씩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서 매년 15%가까이 재해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하청업체나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비용을 정산에 반영을 하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위험에 대한 즉각적 개선을 통해서 ‘당장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산만이 우선이고 안전은 뒷전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반복되는 참사와 재해, 유가족의 행렬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권은 누구도,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도입된 이래 최초의 판결이자 작업중지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대법 판결 이후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편적인 권리로 확장되기 위한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작업중지는 예방과 사후조치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의 주체를 확장하는 싸움을 통해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장합니다.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이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작업중지권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절차와 매뉴얼을 만들어 갑시다.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합동 재해조사를 통해서 재해의 원인을 제거, 통제된 이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하여 동종유사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니다.

더 이상 나와 우리가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의 일터와 사회를 바꾸나갑시다 투쟁!

위험작업 당장멈춰 작업중지권 확대하자!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장모님은 급식노동자였습니다.

희한하게 일을 하면 팔, 다리가 아프고 주말이면 싹 넣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골병’이라 불렀고, 오늘 여기 모인 조직된 노동자들은 근골격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은

암에 걸려 시들어가는 자식을 보며, 자기가 못나서라고 가슴 치는 부모에게 다가가 산업재해라고 했습니다.

벋속에서 사라진 아이를 보며, 자기 몸이 약해서라고 자책하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태아산재라고 위로했습니다.

정신력이 약해 견디지 못했다는 노동자의 마음을 붙잡고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산재예방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사회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비용은 3만 5천 원, 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30만 원 입니다. 노동자 피 뽑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합니까.

4월 11일 구미, 12일 부천, 13일 신림역에서 세 분의 배달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이지만, 플랫폼 공장은 멈추지 않고 재해조사도 안전 제일이라는 노란표지판 조차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동료의 핏자국 위로 산자들의 바퀴가 굴러갑니다.

‘어두운 터널을 자동차로 운전할 때 터널의 출구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어두워지는 시각 현상’

터널시야 라고 불립니다.

고 방영환 열사의 산업재해 판정서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폭언, 폭행, 지속적인 스트레스, 모욕감, 두려움, 고립감, 판정서를 채운 단어들을 하나하나 읽다 밀려오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동료를 절망과 좌절의 터널에 놓아두지 맙시다. 겹겹이 막아놓은 터널을 우리의 연대로 부수고 나아갑시다.

활짝 웃고 있는 동료의 얼굴을 영정사진과 국화 꽃 사이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온 생명이 안전해집니다.

집사가 무사히 돌아와야 고양이가 안전합니다.  
운수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국민이고,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꼭 치러야 할 장례가 있긴 합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쯤은 가볍게 갈아 넣는 자본에, 장송곡을 바치고 국화 꽃을 놓읍시다. 봄날의 꽃놀이처럼 즐겁고 유쾌한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함께 만들 동지들을 믿고 외칩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입니다.

노동자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다치거나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권의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산재은폐가 최소 54%에서 최대 93%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의원이 산재카르텔 주장을 한 후 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산재카르텔은 없었고 언론에 나일롱환자로 보도됐던 노동자들은 부정수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재 처리 기간이 17년 평균 149일에서 23년 214일로 늘어난 것, 역학조사가 17년 178일에서 23년 634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공단은 아직까지 대책마련을 안하고 있고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 추정의 원칙 법적 근거 미비, 소음성 난청 과도한 보상, 장기요양환자 증가를 주장하며 노동계 참여를 전면 배제한 채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F 성원을 비공개 했지만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총 입장을 대변했던 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산재카르텔 발언, 노동부 특정감사,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은 잘 짜여진 각본입니다. 그 각본의 결말은 바로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견을 강화하여 산재 승인을 어렵게 하고 근골격계,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추정의 원칙을 없애거나 후퇴시키려 합니다. 직업성 암에 대한 승인을 어렵게 하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보상을 줄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요양 과정을 통제하고 요양기간을 단축하려 합니다.

울산지역에서 산재병원을 방문해 산재보험 실태조사를 하며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산재카르텔 보도와 특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현장에선 추가상병과 재요양 불승인이 늘고 치료기간이 줄거나 강제 종결이 늘고 있었습니다. 장애보상도 낮게 받거나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재 결정 장기화로 인한 고통을 모두가 호소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개악 논의가 본격화되면 그 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IMF 시절 산재노동자를 탄압해서 노동자들이 비극적 선택을 했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노동자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산재보험법 하나하나는 다치고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이 눈물과 고통과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경총 건의를 받아들여 노동부가 앞장서서 산재보험을 과거로 돌리려 합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가 산재보험을 개악하려 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현재의 산재보험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 산재보상과 인정기준 확대, 선보장 도입, 산재입증책임 전환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후퇴와 개악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투쟁합시다. 투쟁!

### **<인천지역 중대재해사업단 박선유 운영팀장>**

반갑습니다.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박선유입니다.

2021년 5월 24일 남동공단의 한 유류저장탱크 제조 하청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위해 크레인에 걸 어두었던 500kg짜리 철판이 떨어지며 재해자가 깔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4인 사업장인 B업체에서 재해자는 일용 용접공으로 수주 물량이 있을 때만 계약을 반복하며 일했습니다. B업체는 A회사 공장 내 하청업체로 A사의 물량 작업을 했는데, 알고보니 서류상으로는 C회사와 원하청 계약관계였고 A사와는 임대계약만 있었습니다. A사는 친인척들과 여러 자회사를 두고, 공장을 쪼개 소규모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방식의 다단계 구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업체수는 98%, 종사자 수는 52%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는 35%나 됩니다. 22년 산재사고사망자 874명 중 50인 미만이 80%, 5인 미만은 42%나 됩니다. 사고를 살펴보면 끼임, 추락, 맞음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재래형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5인 미만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의무가 없고, 노동부가 개입하는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0인 미만도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법제도의 의무와 책임에서의 적용 제외는 그동안 기업이 쪼개기, 외주화, 특수고용 등의 여러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노동안전의 핵심은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높은 경각심, 안전예산과 인력 확보, 작업중지권 같은 노동자들의 발언력 확대입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사회적으로, 법제도적으로 통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목숨의 가치는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중치법과 산안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서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약식집회

###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현철 인사드립니다. 투쟁!

올해도 4월이 돌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4월 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모순적이게도, 우리에게 4월은 자본의 이윤 추구에 죽어간 노동자 동료들, 국가의 무책임에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3만 명이 일하다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립니다. 그중 약 2천 3백 명은 일

하다가, 일 때문에 죽어 갑니다. 이는 정부에 잡힌 최소한의 통계입니다. 더 끔직한 것은 이 무시 무시하고도 슬픈 통계가 몇십년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해동안 13만명이 다치고 병에 걸리는 현실은 위험한 건설현장, 힘든 제조업 현장, 큰 기계가 움직이는 발전/운송 현장에서 분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시민의 일상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서비스현장에서도 너무 많은 아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실에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적게는 100명, 많게는 170명 분의 밥을 단 3시간 동안 만들어 내야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암을 일으키는 먹통 환기시설이 아직도 너무 많은 학교급식실에 존재합니다.

코로나시기, 우리는 과로사가 두렵다고 절규하던 택배현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류노동자들의 생명을 값어치는 하루 2회전/3회전 배송, 로켓배송, 야간배송, 새벽배송은 더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기사들, 이동노동자와 방문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서 정주하며 일하지 않는 노동자, 차량으로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하는데, 이들의 생명안전권, 건강권을 보장해줄 제도는 전무합니다. 매년 배달노동자의 산재사망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 다 쉴때, 주말도 연휴도 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많은 관광업 노동자, 유통업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관계를 누리고 마음이 쉴 틈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텐데, 그럴 시간과 자원이 봉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다들 하는 말로, 남의 돈 벌어먹는 게 분명 고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의 삶 빼앗아 가라고 했던 말입니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노동자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노동자 시민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자 했고, 근거도 없이 산재노동자를 부정수급자로 매도했습니다. 산재 보상을 안해주려고 제도를 개악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에서 유일하게 일요일이 보장되었던 마트노동자의 근로조건도 개악하고, 유통물류업 노동자에게 야간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의 결과로 흑독한 심판을 받았지만, 자본과 편먹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민생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어느 나라의 노동조합 간부는 ‘일하다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반문했다는 일화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자본의 이기심, 국가의 무책임 때문에 앞서 가신 많은 동지, 동료 시민들이 죽음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더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나와 동지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넘어, 쉼을 누리고 안녕한 삶을 향유하는 데 까지 우리의 지향을 넓혀 나갑시다. 나만의 안전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건강한 한국사회를 일구기 위해, 언제나 그러했듯 우리 노동자가 앞장 섭시다!

동지 여러분!

위험 작업 작업중지권 쟁취합시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전면 적용 쟁취합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쟁취합시다!

윤석열 정권, 노동부 장관 몰아냅시다!

노동자 시민의 연대투쟁으로 안전한 한국사회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 ■ 행진 발언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박중희 경인본부장>

노동자 시민 여러분, 저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잠시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악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일터를 개선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산업재해’는 우아한 사자성어로 표현되는 관념의 사태가 아닙니다. 밥벌이를 하러 일터에 나간 사람들이 물체에 끼여서 몸통이 으깨져서 흩어지고,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서 석탄가루에 범벅이 되고, 고공에서 일하던 사람이 떨어져서 장기와 뇌수가 땅바닥에 쏟아지는 야만의 현장입니다. 그 누구도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오늘 죽어서 퇴근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끔찍한 야만의 나라, 한국에서는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죽고, 13만 명이 병들고 다칩니다.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영정은 바로 일터에서 죽어 나간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 4월 25일에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립니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에서 노동부의 자료를 받아 지난 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을 선정합니다. 살인기업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추락·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협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올해에도 어떤 건설사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될 거라 합니다. 매년 건설사가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인 살인기업이 됩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23년에 58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59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는 29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302명의 건설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만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뻔뻔하기까지 한 정부의 책임으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사회가 끔찍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재작년 10.29 이태원 참사 또 어떻습니까. 경쟁에 시달리며 느끼는 불안에서 잠시나마 해방되고자 축제를 찾았을 우리의 이웃 159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안전대책은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까.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통령과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약으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약으로 최고 책임자 처벌을 막아줍니다.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로 도로 위 시민안전을 팽개칩니다. 마트 의무 휴업일 후퇴로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빼앗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지킵니다. 도로 붕괴,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 수백 명의 시민이 죽어도 책임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하는 누구에게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집행되어야 반복되는 시

민참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 투쟁에 시민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 <화학식품노조 김종호 여천NCC지회 지회장>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화학섬유식품노조 여천NCC지회 지회장 김종호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저희 사업장에서는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폭발참사의 책임이 여천NCC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요부품이 애초의 설계대로 제작되어 설치되지 않았고 규격보다 얇은 부품이 장착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이미 2년전인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회사측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하였습니다.

결국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알고있었음에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그리고 노동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고 당시 여수국가산단 전체가 떠들썩하게 여수산단 특별법이니 노후설비관리특별법이니 온갖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논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후 공동대표이사는 고개숙여 사과하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회사는 다시 공장가동을 위해 노동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했고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해 본인들의 책임을 피해가기 급급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3월 13일 검찰청 순천지청은 2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대표이사 두명에 대해 중처벌에 대한 기소를 하지않고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공장장과 하청업체대표 그리고 현장관리자와 감독자만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아픈가슴과 아직 결혼식을 못하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결혼식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약속했던 젊은 부부와 이제 정년을 불과 2~3년 남겨두었던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아픔은 누가 치유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자가 8명이 죽고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처벌받지않는 세상,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가장을 잃었는데 사업주는 전혀 책임이 없는 세상, 노동자는 목숨을 걸고 일하고있는데 안전에 대한 조치나 예방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세상 동지여러분이 함께 맞서 싸워 주십시오

책임을 져야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세상,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세상, 자본과 정권의 중처벌 무

력화시도에 맞서 동지들과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깃발아래 총단결하여 더 이상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속노조 대창지회 심경수 노안부장>

산재 승인 지연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금속 경기 대창지회 노동안전부장 심경수 대찬 투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산재 승인 지연은 재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1. 경제적 부담으로 재해자와 가족들은 병원비와 생계비를 감당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빛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재해자는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2.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어도 지회 역량이 부족하면 조합원 동지들은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출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게 호소합니다.

3. 마지막으로 산재가 불승인 나면 치료비와 생활비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 현장의 복귀하여 적응도 힘들도 같은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회 사례를 예로 들면 군대 재대 후 건강한 몸으로 20대 중반의 입사하여 20년 후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 후 2번의 불승인 후 1년 만에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불승인 기간에 심경이 어땠는지 물어 보니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산재까지 불승인 나면 이 빚은 또, 언제 청산해야 하나?” 하고 막막한 일상이 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입사하여 20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노동하면서 발생한 통증은 당연히 산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하다 아프면 산재로 치료 받을 권리, 건강한 몸으로 현장으로 복귀할 권리, 이 당연하고 당연한 권리를 꼭, 쟁취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